

한국 교육산업 대해부

2009.12.15 | 김일영_새사연 정치사회연구센터장 | kiy@saesayon.org

목 차

1. 한국 교육산업의 현주소
2. 교육투자의 효과분석
3. 한국 사교육 산업의 현주소
4. 사립학교 실태분석(중등교육까지)
5. 구조조정 기조에 선 사립대학
6. 고민 없는 해외유학 대책



<http://saesayon.org>

1. 한국 교육산업의 현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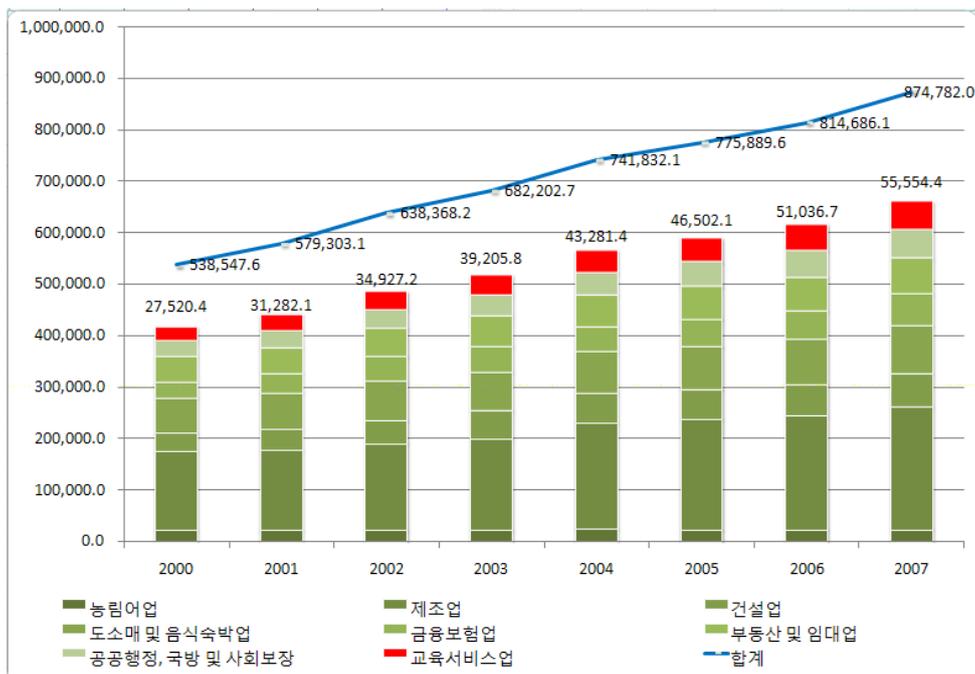
55조 교육산업시장, 공공성은 글썩...

이 글은 '교육산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교육이 산업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고찰하는 데 그 기본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글이 교육에 경쟁원리가 우선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교육을 다각도에서 고찰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이해관계에 무신경하거나 외면하려는 태도와도 거리가 있다. 다만 사실 그 자체를 그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교육산업, 불황기에도 플러스 성장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더 이상 고성장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되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 데 그것은 교육산업이며 불황을 모르고 있다. 전 산업의 침체와 극심한 고용대란에도 불구하고 2009년 5월 교육산업의 고용은 작년보다 3만 7000명이나 늘었다.

그림1. 주요산업 부가가치와 국내총생산액 성장 추이
(한국은행, 단위 : 십억원)



교육 서비스업은 2007년 현재 GDP의 6.4퍼센트로 55조 5544억 원에 이르는 부가 가치를 생산했다. 이는 7년 전에 비해 2배나 성장한 것으로, 금융업, 부동산업, 건설업 등과 어깨를 견주는 여섯 번째 거대산업이 되었다. (그림1)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교육 분야 지출이 많은 나라로서, GDP 대비 공교육비를 비교한 2005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사교육비가 GDP 대비 2퍼센트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9.4퍼센트나 되는 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8.5퍼센트를 능가하는 수치이다.

문제는 이 많은 돈을 누가 지출하고 있는 가다. 통계청의 총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공교육에 지출하는 사부담교육비와 사교육에 지출하는 사부담 교육비를 합산한, 총 사부담교육비는 43조 2827억 원으로 전체의 56.6퍼센트에 달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2005년 현재, OECD 국가의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률 지표에서 한국은 59.7퍼센트를 기록하여 꼴찌다. 고등교육의 한국 정부부담률은 25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교육과 보건 등에서 신자유주의 논리에 충실하다는 미국이나 일본 보다는 낮은 것으로, 교육의 공공적 성격은 재원 부담에서부터 부정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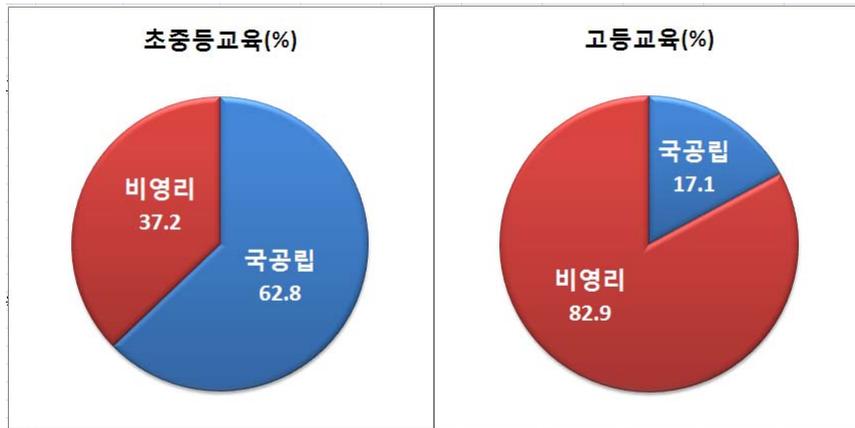
고용의 블랙홀, 교육

교육이 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고용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년마다 시행되는 서비스 총 조사에서 교육서비스업의 고용 규모는 2005년 현재 156만 8000명으로 전체취업자의 6.9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공업, 도소매, 음식숙박업을 이어 4위로, 취업인구의 13.2명당 1명꼴로 교육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4년간 취업자 증가량이 102만 명에 불과한데, 교육부문은 23만 9000명이나 증가해 새로운 일자리의 4개 중 하나는 교육부문에서 창출되었다.

그런데 156만 명에 달하는 교육산업 종사자 가운데 공교육종사자 43만여 명을 제외한 100만 명 이상이 비영리기관이나 사설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이렇게 사적분야에 종사자가 많은 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황수경(2009)에 따르면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교육부문은 '고(高)고용, 저(低)생

교육산업은 부가가치, 고용 등에서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성장해왔다. 그것도 공공부문이 이러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그 재원을 대고 있으며, 사업체나 고용에서도 공공부문보다 사적부문이 더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그림2)

그림2. 공교육기관 구성 비율(국공립, 비영리)



교육에서 공사부문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어렵지만, 교육산업의 사적부문이 작다거나 사적부문을 더 키워야 교육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더불어 정부가 선의의 목적을 갖은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의도하는 효과가 쉽사리 도출될 수 없을 만큼, 사적 이해관계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규모는 일등, 공공성은 꼴찌'인 교육산업의 현실을 기초로 해법이 신중히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은 규모의 성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고용의 질, 서비스의 질, 생산성, 그 비용의 부담에서 모두 부정적인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다. 산업으로서도 개인, 가계, 국가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현재의 투자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를 되돌아보아야한다.

2 교육투자의 효과분석

조기유학과 국내 사교육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일까? 주변의 '기러기 아빠'들은 전자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한발 양보해서 경제적 비용이 더 들어도 입시지옥을 겪지 않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남는 투자란다. 왜 사람들은 우리교육이 조기유학보다도 들인 공만큼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

게 됐는가?

OECD 중 최고 노동시간보다 긴 공부시간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 수능시험이 쉽게 출제되었을 때, 일부 언론은 학생들의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킨다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 학력 비교인 PISA의 결과를 보고나서 그런 목소리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매번의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올려 국가의 자존심(?)을 살려주었다.

2006년에도 5위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수학에 대한 흥미는 31위, 학습 동기는 3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학교 소속감이 부족한 학생의 비율도 41퍼센트에 달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이다. 한국은 주당 학습시간은 49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5시간이나 많다. 반대로 자율적인 학습시간이랄 수 있는 주당 숙제시간은 3시간으로 해당국가 평균인 6시간의 절반에 불과하다.

성인들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도 선진국보다 많다고 한다. 주 20시간 내외의 학습시간으로 세계 1위의 성적을 내고 있는 핀란드와 비교한다면 효율성에서 비교자체가 민망하다.

진학률 최고, 취업률 최악, 학력은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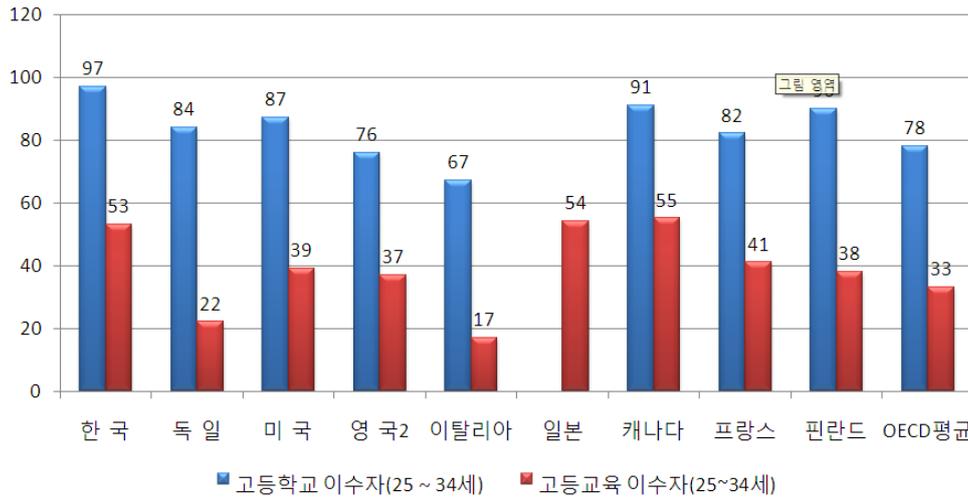
진학연령의 80퍼센트가 넘는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학력격차가 바로 임금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정부가 대학의 설립요건과 정원규제를 풀어 준 덕분에 대학 진학률은 1991~2000년 기간 동안만 34.8퍼센트, 그 후 10년 동안 15.8퍼센트가 증가했다.

고등학교 이수율은 캐나다,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양적으로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교육 참가수준은 높아졌다.(그림3)

진학률이 투입이라면 취업률은 산출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취업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유명한 덴마크는 90퍼센트에 육박하는 취업률을

보이는데, 우리는 OECD 평균보다 7.2퍼센트나 낮은 77.2퍼센트에 불과하다. 대학 졸업 유무에 따라 취업률 격차가 2006년 현재 6.9퍼센트나 되기 때문에 대학교육 포기는 취업포기와 비슷한 말이 된다.

그림3. 청년층의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
(OECD, 2006, 단위 : 퍼센트)



학력에 따라 취업 후 임금 격차도 많이 나서 학력은 평생의 짐이 된다. 2007년 현재 전문대졸업자와 고등학교졸업자의 평균임금격차는 전체 평균임금의 5.1(여자)~6.0(남자)퍼센트 수준이다. 대졸자와 전문대졸업자의 임금의 격차는 더 심해서 28.4(여자)~43.9(남자)퍼센트에 달한다. 어중간한 학력은 본전을 더 생각나게 하는 셈이다.

대학 나와도 절반이 비정규직

그렇다면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안정된 사회생활은 가능한가? 2008년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76.7퍼센트고 정규직 취업률은 56.1퍼센트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교육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일반대학원을 제외한 일반대학의 정규직 취업률은 48.0퍼센트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표1)

대졸자들은 평생을 좌우하는 첫 직장을 고를 때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취업 시기를 늦추더라고 안정된 직장을 찾는다. 하지만 '신의 직장'이라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대졸자의 45.4퍼센트는 중소기업에 취업했고, 교육 및 보건 분야에 11.7퍼센트, 대기업에 11.1퍼센트,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4.7퍼센트의 순이다. 비정규직을 제외한 정규직만을 보면 대기업은 9.7퍼센트, 행정 및 공공기관은 4.0퍼센트만을 고용하고 있다. 취업률이 낮을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도 기대이하인 것이다.

표1. 200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현황
(교육통계서비스, 2008)

(단위: 명, %)

구분	취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
고등교육기관	387,487 (76.7)	283,610 (56.1)	94,824 (18.8)	9,053 (1.8)
전문대학	167,526 (85.6)	126,286 (64.5)	37,372 (19.1)	3,868 (2.0)
교육대학	4,942 (72.3)	4,574 (66.9)	366 (5.4)	2 (0.0)
대학	170,878 (68.9)	119,079 (48.0)	48,690 (19.6)	3,109 (1.3)
산업대학	19,133 (79.8)	15,144 (63.1)	3,231 (13.5)	758 (3.2)
각종학교	173 (73.0)	125 (52.7)	45 (19.0)	3 (1.3)
일반대학원	24,835 (81.6)	18,402 (60.5)	5,120 (16.8)	1,313 (4.3)

※ (%)는 취업률을 의미함.

'배운 여자'도 차별받기는 마찬가지

여성의 대학진학은 2005년 현재, 30년 전보다 1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배운 여자'들이 엄청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배운 여자도 차별받기는 마찬가지다. 전문대학에 비해 일반대학은 지식기반 경제와의 관련성이 높고 사무직종의 고부가가치 직업으로의 진출가능성이 높아서 여성 친화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성의 일반대학진학률이 남자보다 많이 낮다. 교육기간이 길고, 취업이 쉽지 않은 일반대학보다 교육비가 적게 들고 취업이 잘 되는 전문대학을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기여도가 높고, OECD국가 여성의 일반대학진학률은 남성보다 12퍼센트나 높다. 즉, 여성의 일반대학 진학률이 저조한 것도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한 지표다.

같은 학력일지라도 여성은 임금차별을 받고 있고, 고학력 직업일수록 남녀 임금차별은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예 취업자체에서도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데, 전문대졸의 경우 남녀 취업률 차이는 크지 않으나 일반대학과 일반대학원 졸업자는 5~10퍼센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취업률의 격차는 정규직 취업률에서도, 대기업 취업률에서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여성의 일반대학 이상의 교육투

자는 기대만큼의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돌아오고 싶지 않는 나라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10년간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딴 사람 중에서 미국에 계속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2배 이상 늘어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집트, 인도네시아 3개국에 불과하다. 대학 연구원 100명 당 미국 내 우리나라 학자 수는 13명으로 세계 최고다. 한국이 미국의 고급인력 충원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셈인데, 이들이 한국에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실용기술에 대한 투자는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지만 정부나 대학의 기초과학 투자는 부족한데서 기인한다.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이 많고, 대학의 전임교원 등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외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방향과 기술순환 주기의 특징을 보면,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며 그 효용성은 오래가지 못하는, 응용기술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실용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몇몇 산업을 제외하고는 노동생산성이 낮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할 때 12퍼센트나 더 일을 시키고도 노동생산성은 59퍼센트나 낮은 나라다.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기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늘리기보다는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노동생산성의 부진을 만회하는 방식을 추구한 결과다. 이는 로열티라고 불리는 29억 2500만 달러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로 나타난다.

좋은 사회라는 증거가 너무 없다

세계 최고의 학습시간, 최악의 취업률, 절반이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차별, 인적자원을 홀대하는 고용관행, 혁신의 선두에 서지 못하고 있는 고등교육 등 우리 교육시스템의 효과성을 의심케 하는 지표들이다.

지식기반경쟁력을 높이려면 인적자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패러다임부터 갖추어야 한다. 필자조차도 조기유학보다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더 좋다고 주장하는 데 주저된다. 한국사회가 돌아오고 싶고, 일하고 싶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 좋은 사회라는 증거들이 너무 없다.

3. 한국 사교육 산업의 현주소

갈수록 늘기만 하는 사교육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부터 사교육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통계조사를 위해 그 개념과 범위부터 표준화하였다. 정부는 '사교육이란 초, 중, 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2008년 현재 사교육비 총액은 20조 9095억 원으로,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인당 월평균 31만 원이다.

정부의 정의대로 사교육이 과연 보충교육인가? 가계의 근로소득 대비 9.3퍼센트, 가계지출 대비 12.6퍼센트를 교육비로 지출하는데, 그 중 사교육비는 63.3퍼센트나 된다. 정부의 입장으로는 보충교육이지만, 가계의 입장에서는 '보충'이라기보다 '자구적인 정규교육'이다.

사교육에는 9만여 개의 사교육관련 기업과 약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취업자가 있다. 역기능을 개의치 않는 GDP 지표를 키우는 데 큰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서비스 총 조사'는 사교육분야에 사업체수 8만 8568개, 종사자수 35만 5298명, 매출액 10조 5765억 원, 영업이익이 3조 5031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교육은 업체 수에서 73.4퍼센트, 종사자 29.9퍼센트, 매출액18.8퍼센트, 영업이익 56.1퍼센트를 점하고 있다.

잘 나가는 사교육의 대기업들

사교육계의 강자는 상장된 사교육 관련 교육서비스 업체들이다. 학습지업계 1위인 대교, 온라인강의업계 1위인 메가스터디, 어학교육 1위인 YBM시사닷컴을 비롯해 비유와 상징, 에듀박스, 정상제이엘에스, 청담러닝, 디지털 대성, 웅진싱크빅, 능력교육, 이루넷 등은 모두 사교육의 강자들이다. 11개 업체의 2007년도 매출액 총액은 1조 8282억 원, 영업이익은 2285억 원에 달한다. 또한 2009년 종사자 합계는 8198명이다. (표2)

이들 상장업체들은 전체 사교육 업체수의 0.02퍼센트, 종사자 2.76퍼센트를 고용하고 있지만 매출액은 15.95퍼센트나 된다. 5천개 중의 1등 하나가 전체의 약 6분의

1을 독점한다. 나머지 4999개의 업체가 남은 84퍼센트를 가지고 아옹다옹 하고 있다.

표2. 상장 교육주 매출액 및 영업이익
(2009, 매일경제신문사, 재구성)

구분		종사자 (명)	매출액(억원)			영업이익(억원)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대교	가정방문학습지 1위	3,168	8,297.0	8,466.3	8,410.9	639.3	785.2	572.1
메가스터디	온라인강의 1위	586	1,013.5	1,633.6	2,023.1	324.1	583.7	675.6
비유와상징	교육출판 선두권	333	515.1	658.5	765.1	168.3	198.8	126.7
에듀박스	영어, 방과후, 온라인	558	408.4	456.6	483.2	-7.7	16.3	10.2
정상제이엘에스	영어전문	197	266.6	446.7	787.0	2.9	18.0	84.1
칭답러닝	어학원전문	367	463.8	628.6	830.4	83.6	107.6	146.3
YBM시사닷컴	어학교육 1위	269	425.8	536.6	663.7	127.5	136.7	151.1
디지털 대성	학원 및 교육프랜차이즈	152	199.5	188.4	312.0	16.4	-8.6	-6.5
웅진싱크빅	방문학습지	2,227		4,727.2	7,846.1		416.3	659.0
능률교육	영어학습교재	205	276.4	324.7	376.5	5.4	47.3	43.7
이루넷	종합교육전문기업	136	246.9	215.5	185.5	-15.4	-15.4	-38.8
합계		8,198	12,113.0	18,282.7	22,683.5	1,344.4	2,285.9	2,423.5

또 다른 강자는 대형학원과 고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음성적인 고액과의 공급자들이다. 심야 학원영업 제한과 같은 조치나 단속을 피해, 고급호텔에서 첩보작전을 무색케 하는 고액과의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정부의 단속도 무용지물이다. 대형학원들은 어떤 교육정책에도 능수능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불법적인 것도 마다하지 않는 노하우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사교육시장을 키워가고 있다. 교육정책의 잦은 변경은 사교육계 강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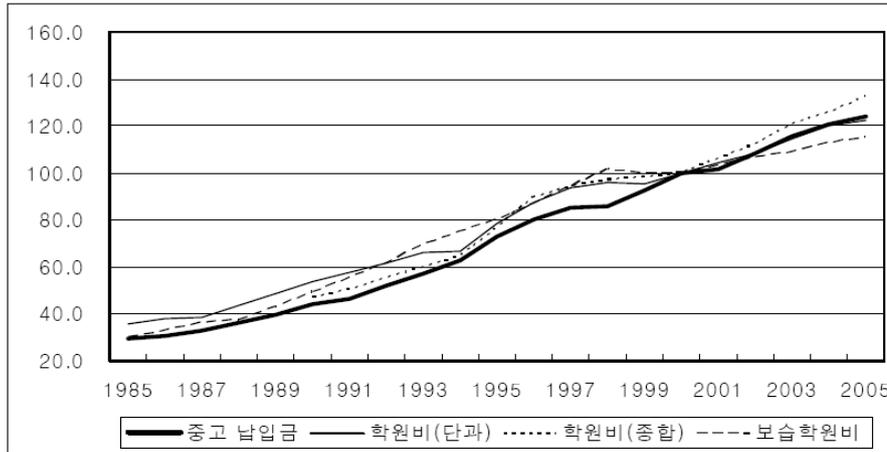
중소기업들은 고(高)고용, 저(低)수익

정부의 '사교육과의 전쟁'에 대해,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의 경감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으로 중소학원을 때려잡는 방식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방과 후 학교' 활성화나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치와 같은 정책은 입시경쟁 사회에서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는다고 본다.

서울시에는 예능학원을 제외한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학원만 2004년 4765개이던 것이 1760개나 늘어나 2008년에는 6525개나 있다. 매년 9.2퍼센트씩 증가해 36.9 퍼센트나 늘어났다. 하지만 취학 학생 수도 줄고, 학원 수강생 수도 64만 6243명에서 약 8만 5000명이나 줄어 56만 1097명을 기록하고 있다. 중소학원들은 수요의 감소를 수강료의 상향평준화를 통해 해결해왔다. 수강료 최저액은 5만 4400원에서 14만 5656원으로 2.68배나 높아졌다. 그러나 학원비인상률은 중고등학교 납입금

인상률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림4)

그림4. 학원비의 물가상승률
(2006, 김미숙 외)



학원비가 대폭 상승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은 대형학원들이 갖가지 부대비용을 증가시켜 수익을 늘려온 것과 공교육 정책의 변화에 따라 사교육의 과목이나 종류를 늘리게 되면서 개별 가정의 사교육비 총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8년 서울시에 있는 학원의 평균적인 모습은, 수강생 수 86명, 학생 23명당 1명 꼴의 강사, 한 학원에서 고용하고 있는 강사 수는 3.7명으로, 수강료의 중간 값으로 계산한 월 매출액은 약 1644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동네 학원에서는 수강생이 50명 만 넘어도 안정권이라고 보고 있으며 매출액이 월 1000만 원을 넘기는 곳은 드물다고 한다. 강사는 2~3년 경력의 4년제 대졸자도 하루 7시간 수업을 해야 월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고학력자들의 실업피난처, 학습지 회사

사교육 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공급자인 학습지교사와 과외교사는, 2006년도 교육산업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10만 명, 2007년 서비스 통계로는 7만 846명이다.

김영두(2007)에 따르면 학습지교사들의 소득수준은 상용직의 55.9퍼센트 수준에 불과한 월평균 164만 원이다. 주로 명문 대학을 안 나왔거나, 출산 후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는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 있다. 학습지 회사들은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여 사용자의 기본 의무를 회피하여 사회적으로도 많은 지탄을 받았다.

한편, 과거 대학생들이나 고학력자들이 주변 연고를 통해 알음알음 하던 과외는 인

터넷과의 알선업체들의 등장으로 옛말이 됐다. 아예 명문대 출신들로만 구성해 규모를 키운 곳도 있다. 이런 곳은 주 2회 4시간씩 수업할 때 월 과외비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받는다. 과외교사가 대학생일 경우는 30~45만 원, 대학원생이거나 졸업한 경우에는 40~60만 원 상당을 받고 있다. 드물지만 80~100만 원을 받는 교사도 있다.

명문대 학벌로 건당 50만 원의 과외비를 받는다고 해도 알선 수수료 등을 떼고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으려면 7건의 과외수업은 해야 한다. 그렇다면 주 28시간이며, 주 5일로 계산할 경우 하루 5.6시간이다. 통상 방과 후인 7시 이후에 과외가 이루어짐으로 자정을 넘겨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마저도 명문대학이라는 학벌을 가지고 있을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일일이 계산할 수 없지만 과외사이트마다 500명씩 과외교사가 등록되어 있다고 해도 10만 명이다. 과외교사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半)실업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의 약자만 잡는 정부 대책

교육서비스업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100만 명에 이르는 종사자가 있는 사교육시장은 경제위기에서 상당한 고용흡수력을 보이고 있다. 2008년도 고등교육(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38만 7487명 중에서 5만 4094명이 교육산업으로 진출하였다. 이는 7.2명당 1명꼴인데, 그야말로 고용에 있어서는 효자산업이라 할 수 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해고된 대기업 정규직들의 고용 완충역할을 자영업이 담당했지만 결국 공급과잉을 유발했다. 현재 교육산업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규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때, 힘 있는 대기업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새로운 생존대책을 만들어 내겠지만, 영세한 공급자들이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교육과의 전쟁은 사교육 내의 약자들만을 소탕한 채 사교육 대기업은 번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4. 사립학교 실태분석(중등교육까지)

유치원 의무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유는 '소비 진

작을 위해서'다. 참 '경제'적이다. 어쨌든 서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4대강 사업과 감세로 바닥난 국가재정을 생각할 때 가능하기는 한지 의심스럽다.

94.5퍼센트의 사보육,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유치원 의무교육

교육비용의 국제비교를 보면, 2005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살펴보면 OECD 평균은 8553달러인데, 우리는 그 72.6퍼센트에 불과한 6212달러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유아교육 단계에서 우리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426달러로 OECD의 5254달러의 50퍼센트에도 못 미치고 있다.

부실한 영유아 교육투자는 2007년 6월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대상 연령 아동(주민등록상 만 5세 미만 아동)인 약 283만 명의 37.5퍼센트인 106만 명만이 보육 시설에 다니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영아(0~2세)의 26.6퍼센트와 유아의 42.8퍼센트가 해당한다. 이 중에서 정부의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은 59만 7037명에 불과하다. 2006년 OECD국가들은 영유아 교육에 국가가 평균 60퍼센트 넘게 재정을 분담하는 데, 우리는 거꾸로 부모들이 70퍼센트를 부담하고 있어 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2008년 12월 현재, 보육시설의 94.5퍼센트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사보육 시설(법인, 개인), 부모협동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등은 모두 민간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시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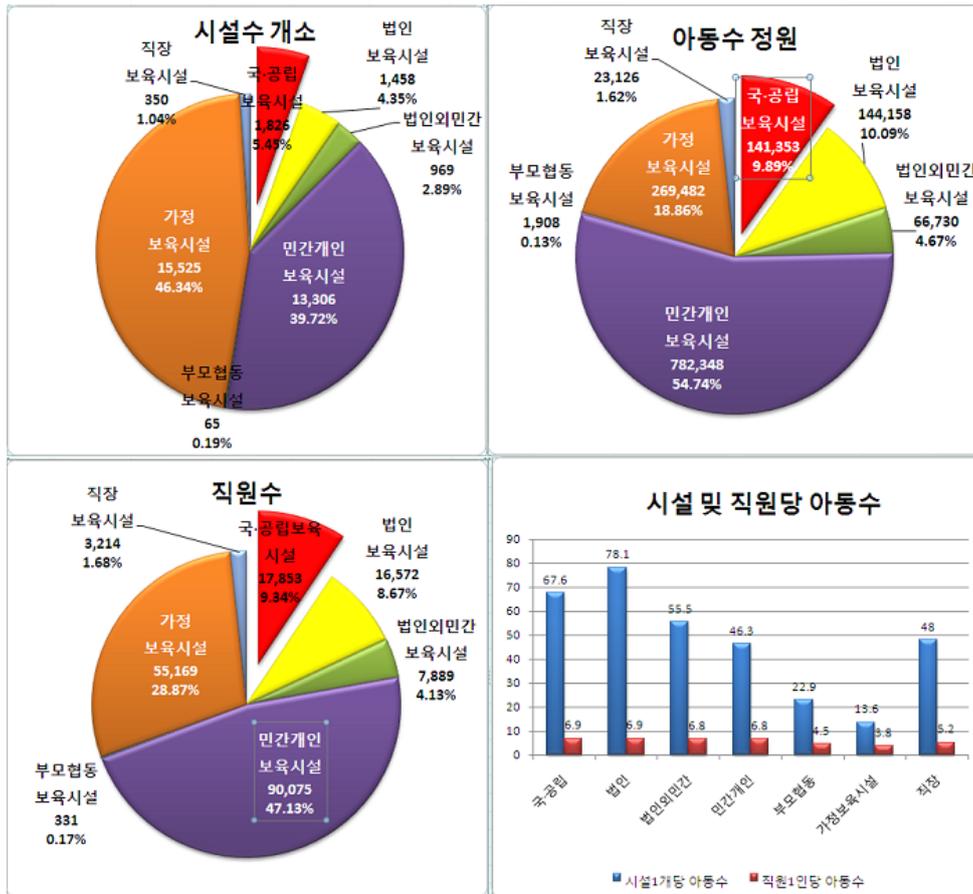
그 중에서도 법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고 그 재원은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민간개인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개인보육시설은 총 시설 수의 39.7퍼센트, 보육 아동 수에서 54.7퍼센트, 고용직원수에서 47.1퍼센트를 점하고 있어 보육시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그 다음이 가정보육시설로 시설 수 46.3퍼센트, 보육 아동 수는 18.9퍼센트, 직원 수는 28.9퍼센트에 달한다. 둘을 합치면 시설 수 86.0퍼센트, 보육 아동 수 73.6퍼센트, 고용직원수 76.0퍼센트를 점하여 전체의 3분의 2를 넘고 있다. (그림5)

한편,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살펴보자. 시설수로는 국공립이 절반을 넘지만, 원아 수는 사립이 77.8퍼센트로 월등히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최고 수업료가 48만 5000원이나 돼서 공립보다 10배 이상 비싸다. 그래서 도시의 서민들은 유치원이 아니라 수업료의 절반으로 더 긴 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선호한다.

그림 5. 보육시설 설립별 기본지표
(2008년 교육통계연감, 단위 : 개, 명)



유치원 의무 교육화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기존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놓을 수 있는 굉장히 파괴력이 큰 정책이다. 보육시설은유치원으로 빠져나갈 아동들의 공백을 메워야 하고, 도시에는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해야 하며, 사립유치원은 보다 더 귀족화를 추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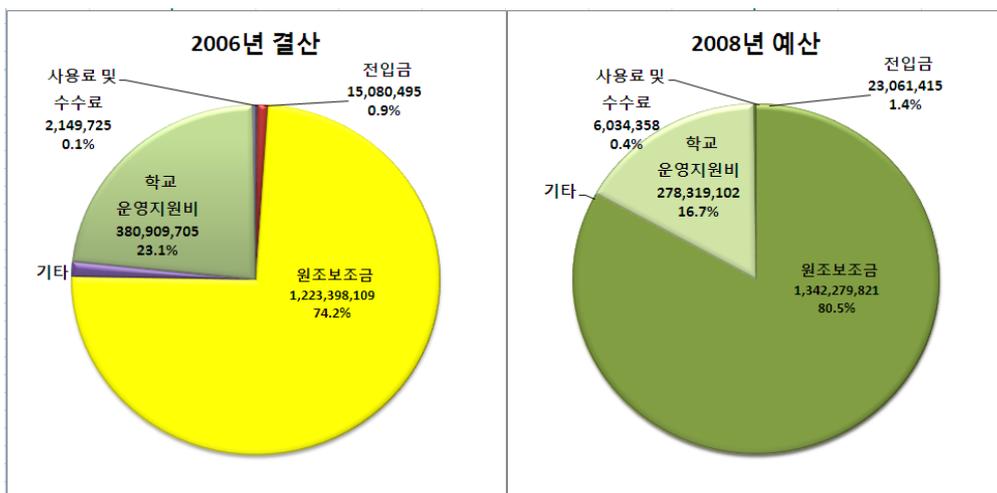
의무교육의 사립은 귀족학교로 간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교육도 2004년부터 의무화되었다.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약 1퍼센트를 책임지는, 사립초등학교 세입총계는 2006년 결산 기준으로 2434억 원, 2008년 예산기준으로는 2717억 원이다. 2008년 예산기준으로 볼 때 1개교 당 36.2억 원이며, 학생 1인당 약 602만 원을 쓰는 셈이다. 사립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자녀들이 많이 간다. 그래서 학교재정의세입도 수업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학교운영지원비도 사부담이기 때문에 재정의 80퍼센트를 학부모가 감당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4퍼센트에도 미치지 않는다. 게다가 재단전입금은 2006년에 10.9퍼센트에서 2008년에는 8.9퍼센트로 줄어들고 있다.

한편, 중학교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사립중학교의 세입총계는 2006년 결산기준으로 1조 6484억 원, 2008년 예산기준으로는 1조 6670억 원이다. 1개교 당 연간 25.6억 원이며, 학생 1인당으로는 약 449만 원을 쓰는 셈이다. 학생1인당 교육비가 사립초등이 사립중보다 많은 것은 사립초등은 사실상 고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귀족학교'이기 때문이다. 사립중학교는 최근의 국제중학교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학교선택권이 없고, 사립초등학교와는 달리 의무교육이라 정부의 지원금이 2008년 현재, 80.5퍼센트에 달하고 있다. 1퍼센트 내외의 전입금만이 유일하게 사립이라는 증거다. 사립중학교 중에서 공립의 전환한 곳이 증가하고 있다. 점점 사립의 비율이 줄어들면 사립초등학교처럼 귀족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림6)

그림 6. 사립 중학교 세입의 구성비
(2008, 교육통계연감, 단위 : 천원)



3단계의 계급화를 눈앞에 둔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교육에서 사립고등학교는 학교 수의 43퍼센트, 교원 수 44.4퍼센트, 직원 수 41.8퍼센트, 학급 수 45.8퍼센트, 학생 수 46.6퍼센트를 분담함으로써 전체 고등학교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2008년도 수업료가 145만 800원, 학교운영지원비는 32만 1600원으로 177만 2400원이나 된다. 이런 사부담은 공립과 사립의 구별 없이 공히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사부담이 사립고등학교의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현재, 42.4퍼센트였으나 2008년에는 47.4퍼센트로 5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다. 액수로 보아도 약 3071억 원이나 늘어났다. 반면, 정부의 보조금은 세입 비중에서 3.9퍼센트나 줄고 액수도 1272억 원이 줄어들었다.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단전입금도 286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또한 12억 원에 달하던 차입금 계정은 6천만 원으로 확 줄고 적립금은 17억 원 수준에서 4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려서, 학생들로부터 거둔 비용으로 빚 청산하고 적립금 규모만 키운 것으로 마치 사립대학을 보는 것 같다. 문제는 고등학교야말로 경쟁논리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파고들어 교육의 시장화가 쉽게 전개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사립학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중등교육까지의 사립교육기관에 대한 실태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보육에 대한 지원확대와 유치원 의무교육 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사립학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서 양극화가 심각하지 않지만, 국제중학교 육성정책 등으로 인해 황제교육 코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학의 서열과 그에 맞춰진 교육풍토를 바꾸지 못하면 사교육 때문에 그 이름만 의무교육이 될 것이다.

셋째, 현 정부의 정책은 사립고들이 교육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만 들어가는 자사고가 되는 것에 '올인'하도록 내몰 것이다.

최근 입시고가 꽤 버린 특목고를 자사고를 바꾸어 특목고에 지원되던 예산을 일반 공립고로 돌리겠다는 한나라당의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 사립학교들이 공교육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사고라는 일색화된 선택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해야 한다.

5. 구조조정 기조에 선 사립대학

가장 먼저 멸종할 공룡, 사립전문대

전문대학은 기술인력 공급이라는 취지에 따라 육성되었고, 학력이 높아지면서 1990년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났다. 현재 147개의 전문대학이 있으며 사립전문대는 그 중 93.2퍼센트를 차지한다. 일반대학보다 취업률이 높지만 학생들이 점점 더 외면하고 있다. 전체 전문대학의 학생충원율은 92.1퍼센트, 사립전문대학의 평균 학생충원율은 그보다 더 낮은 91.7퍼센트에 불과하다. 정말 심각한 곳은 비수도권 소재 사립전문대로 86.9퍼센트에 불과하다. 수도권 소재 사립전문대학도 휴학생 비율이 2008년 현재 36.7퍼센트에 이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좋은 학생충원율을 자랑할 처지가 아니다. 4년제 대학의 휴학생 비율은 30퍼센트 초반을 유지해왔다.

10명 중 9명만 채우고 있다는 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인데, 사립전문대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시장논리가 무색하게 비싸다. 국공립전문대 보다 2배나 많다. 입학금 최고액은 95만원으로 국공립 입학금 최고액인 43만6000원의 2배, 수업료 최고액은 860만 2000원으로 국공립의 452만 2000원보다 1.9배나 많다.

줄어드는 학생 수에도 불구하고 높은 학비는 높은 등록금 의존율로 나타난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 2006년 41.2퍼센트에서 2008년 34.3퍼센트로 확 낮아진 반면, 사립전문대는 35.6퍼센트에서 37.3퍼센트로 상승해 사립대학을 추월했다.

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높은 취업률을 무기로 하는 사립전문대는 미래수익 면에서는 실망스럽다. 4년제를 다니지 않고 2년제 전문대를 다닐 경우 2158만 원이 절약된다. 하지만 전문대졸업자와 대학졸업자의 1년 임금격차가 1156만 8000원이나 되기 때문에 2년이면 상쇄된다.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일반대학들조차 학생충원율이 떨어지면 학생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고등교육의 최하층에 처한 사립전문대학들이 그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폴리텍 대학과 같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새로운 교육기관이 기술인력 육성을 대체하고 있기에 앞으로 더더욱 정체성의 위기를 맞을 것이다.

퇴출 2순위의 위기, 비수도권 사립대학

일반대학의 8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가 국공립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수도권 사립대학이 1361만원으로 수도권 국공립대학의 2560만원의 절반 수준이고, 비수도권 사립대학도 980만원으로 비수도권 국공립대학의 1620만원의 60퍼센트에 불과하다.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비용은 적고 수업료는 비싼, 사립대학이 과연 교육의 질을 장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기대이익이 높은 국립대 의학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 낮은 수업료를 받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가 온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립대에게만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순서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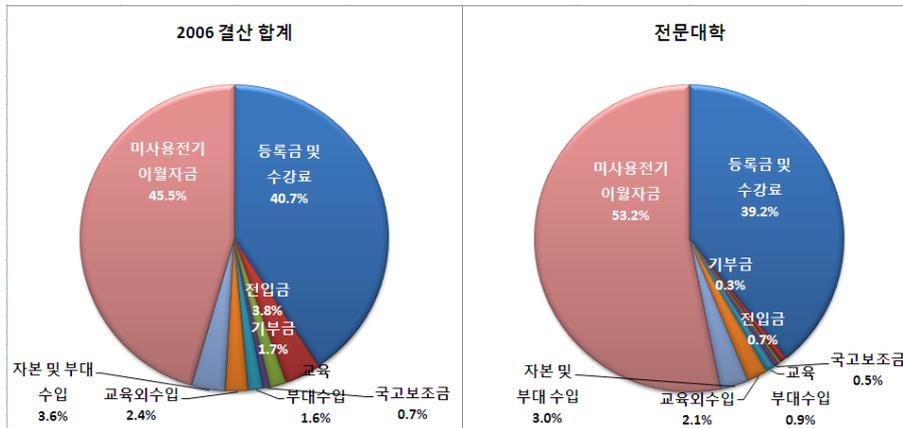
더 큰 문제는 사립대학 내부의 양극화다. 수도권의 사립대학과 비수도권의 사립대학은 서열에 따라 등록금 격차도 많이 나고, 학생충원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인문사회계열의 수업료는 약 4배, 다른 계열도 약 2배에 육박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비수도권의 사립대학은 학생 수 감소와 낮은 수입으로 재정위기가 우려된다. 정부나 기업의 연구지원비를 많이 따내는 것이 교수의 실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재정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학생유치가 어려워지는 현실 때문에, 대학 신설을 신청한 학교법인들 중 개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이 24개나 되고, 12개 학교는 아예 개교도 하지 못한 채 강제 해산 당하기도 했다.

등록금, 적립금으로는 사립대학을 살릴 수 없다

사립고등교육기관의 재정에서 가장 큰 특징은 등록금 및 수강료가 40.7퍼센트를 차

지하고, 그보다 더 많은 비중인 45.5퍼센트가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이라는 것이다.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의 재원도 사실상 등록금 및 수강료의 누적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70퍼센트 이상이사부담에 의존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비 공부담은 GDP 대비 0.6퍼센트로 OECD 평균인 1.1퍼센트의 절반수준이다. (그림7)

그림 7.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2006년 결산 세입구조
(2008, 교육통계연감, 합계는 산업대 등 각종학교 포함, 단위 : %)



문제는 사부담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고등교육이 가계에 많은 부담을 주어왔고, 최근의 경제위기는 가계의 지불능력을 약화시켜 임계점에 다다르게 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등록금 인상은 여론의 몰매감이 되어버렸다. 이명박 정부마저 등록금 후불제를 핵심적인 친 서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의 누적효과를 누리기 위해 고안한 것이 적립금이다. 사립대학들이 그동안 쌓아놓은 자금은 2008년 현재 5조 4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립대학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퍼센트 수준으로 산정한 미사용 차기이월금이 결산시기가 되면 10퍼센트 수준으로 상승하도록 해왔고, 그 중 일부를 적립금으로 축적해 왔다. 시민단체들과 학생들은 이렇게 쌓아두는 적립금만 줄여도 등록금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인 대학발전을 위한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공급과잉을, 높은 등록금은 경쟁력 하락을 초래하여 대규모의 대학구조조정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사립대학에 자구적 노력을 요구하지만 기부 문화가 일천하고, 자산의 현금 수익성도 낮은 상황에서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

다. 그렇다고 이번경제위기 때 큰 손실을 입은 모 사립대학처럼 펀드투자를 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해법은 국고보조금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한다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상위 5퍼센트가 아니라 두터운 30퍼센트를 앞세우는 개혁이 필요

문제는 정부가 상위 5퍼센트의 사립대학들을 어르고 달래는 식으로 해법을 찾아왔다는 데 있다.

오히려 선진국 수준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의 투자를 늘려 나가는 것이 대세라면 그러한 재정을 인적, 물적 자원이 열악해서 존립의 위기에 서게 될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을 대상으로 혁신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를 축으로 혁신의 의지가 있는 비수도권 사립대학들을 묶어 통합, 협력, 감축, 평생학습수요 개발 등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혁신함으로써 국가적 인적자원 육성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야 한다면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고등교육 발전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천재 1명이 온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망상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일하고 나누는 사회를 꿈꾼다면, 고등교육의 혁신도 상위 5퍼센트의 사립대학이 아니라 다수의 사립대학을 주체로 세울 수 있어야 현실성도 있고 바람직하다.

6. 고민 없는 해외유학 대책

조기유학 뿐 아니라 청년실업이 심각한 요즘 청년들에게 어학연수는 취업을 위한 필수 스펙이 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7년에 유학연수로 벌어들인 돈은 4천4백9십만 달러에 불과한데, 쓴 돈은 50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돈(1\$=1183원, 2009년 11월 3일 종가)으로는 5조 9445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할 것으로 적자 폭은 2001년에 비해 4.7배나 증가했다.

위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기유학

해외유학은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것으로 고등교육과정의 일반 유학과 그 전에 가는 조기유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전에는 모두 위법이었던 '미인정유학'으로 자비를 들여 고졸미만의 학력소지자가 유학을 가는 것이다. 2000년에 규제가 완화되어 중학교만 졸업하면 자비유학이 인정되어 '미인정유학'의 범위는 줄었다. 2007년만 하더라도 전체출국학생 중 50퍼센트가 미인정유학이다.

표3 . 조기 유학의 종류
(2007, 국제교육진흥원)

구분	내용
인정유학	자연과학, 예체능 등의 분야에서 특수한 업적을 이룬 자, 특수교육대상자 등으로서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수는 매우 적다.
자비유학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지닌 학생이 자비로 유학을 가는 경우
파견동행	부모가 직장에서 해외파견 등의 이유로 인해 자녀가 어쩔 수 없이 유학을 가는 것으로 부모 모두 동행하는 경우
해외이주	가족전체가 이민을 가는 경우
미인정유학	유학을 가는 초·중학생으로서 위에서 제시한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유학을 가는 경우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인정 유학임. 파견동행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국내에 남으면 불법이 된다.

초등이 주도하는 조기유학, 장기화되는 중고등학생 유학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을 통해 조사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초·중·고등학생들의 출입국 현황을 보면 출국은 2006년 2만 9511명으로 정점을 보인 후 잠시 주춤하고 있고, 입국은 2007년 2만 277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동기간 동안 출국 후 입국하지 않고 외국 체류 중인 조기유학생은 2만 6914명으로 전체 유학생 수의 10퍼센트 수준에 달하고 있다.

조기 유학의 특징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출국하는 학생들의 증가속도가 초등학생이 4배, 중학생은 3배, 고등학생은 2배씩 증가하여 출국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둘째,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출국자와 입국자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데,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유학이 장기화되고 있다.

셋째, 2003, 2004년의 초등학생 입국자의 수가 늘어난 것은 카드대란과 같은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출국과 입국의 장기 증가추세는 둘 다 뚜렷해서 초등학생들의 유학은 단기적인 형태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건동행이나 해외이주를 제외한 순수해외유학의 경우 5년 간 3배 이상 증가했지만, 1년에 출국하는 순수유학생은 전체 학생 1000명당 3명~4명 수준이다. 그럼에도 서울경기 특정지역의 경우 초중등학생 중 4명당 1명꼴로 유학연수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에 대한 언론보도도 있다. (동아일보, 2009.5.18)

아직까지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인 조기유학

한 민간단체가 조사한 기러기 아빠들의 소득, 직업, 송금액, 유학비용 사용처 등에 설문조사결과를 잠시 소개한다.(출처: 국제교육진흥원, 2007, 조기유학바로알기)

기러기 아빠들의 직업은 교수가 28퍼센트, 사업가가 27퍼센트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고, 소득은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까지가 32퍼센트,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까지가 26퍼센트로 절반이 넘었다. 평균적으로 매월 300~500만 원 정도를 송금하고 있는 데, 소득보다 많은 돈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300만원 미만 소득자의 경우는 50퍼센트가, 500만원 미만은 19.2퍼센트, 7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에도 12.5퍼센트나 됐다.

국내에서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유학비가 충당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과도한 주장일 가능성이 높다. 두 집 살림으로 생활비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고, 환율변동과 낮은 곳에서의 대응력 취약 등을 고려하면 조기유학은 아직까지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진짜 문제는 고등교육 유학

유학을 가는 이유는 당사자들마다 다양하다. 평준화교육을 문제 삼기도 하고, 경쟁

교육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이를 다 담는 원인을 말하긴 어렵지만, 한국사회와 교육이 학력서열화가 심해서 한편으로는 너무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진로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은 늘어난 대학정원을 채우기도 힘들어 하는 데, 정작 외국유학의 길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늘고 있다. 그 규모는 2008년 현재 7년 전보다 6만 6934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1만 명의 학생정원을 가지고 있는 종합대학교의 한 해 신입생을 2500명으로 볼 때, 매년 3.8개의 대학이 사라져서 7년간 26.7개나 없어진 것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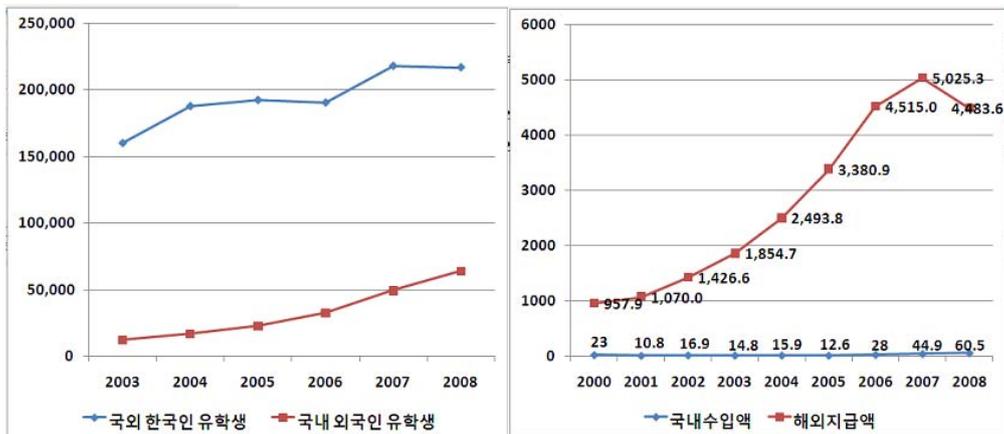
당신은 유학가고 싶은 유혹이 없었나?

2007년도 한국의 일반대학의 등록금 평균은 690만원, 등록금이 비싸기로 유명한 이화여대의 인문사회계열 1년생의 등록금은 955만원이었다. 서울로 유학 온 지방학생들이 숙식과 기타 비용으로 월 80만 원(하루식비 1만원씩 30만원, 월세 30만원, 용돈 및 교재비 20만원)정도만 쓴다고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교육비는 1650만원(690만원 + 960만원)에 달한다.

최근 유학생이 가장 많았던 2007년의 연평균 환율은 1달러에 930원 수준이었다. 당시 유학생 1인당 쓴 유학비용(약 2만3056달러)은 우리 돈으로 2144만원이다. 국내에서 대학 다니는 것보다 약 500만원이 비싸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충당하기 좋고 장학금도 많다는 영미 국가들과 서울의 높은 물가수준을 생각하면 비용차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림 8 . 유학생 유입유출(좌) 과 유학경비 수지(우)

(교육통계서비스, 단위 : 명, 백만달러)



대학교육의 개혁 없이 교육서비스 확자는 불가능

정부는 교육서비스의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외국대학 분교 유치,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는 외국인학교 설치, 외국교육기관인 송도국제학교 개교 등 다양한 개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학교를 몇 개나 만들어야 점증하는 유학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7년 교과부가 실시한 고등교육 국제화 현황조사(약 190여개)에 따르면, 정부가 OECD국가의 대학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근거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25명 미만을 충족한 대학은 30개교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교육기본시설확보를 100퍼센트를 채우지 못한 학교는 153개에 이르렀다. 게다가 교육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은 미국보다 국공립은 50퍼센트나 높았고, 사립도 40퍼센트가 높았다.

교육당국자 중에는 여전히 외국대학분교 유치를 주장하는 데, 유능한 교수가 본교의 우수한 시스템과 동떨어진 분교에 근무하려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착각이다. 사실 교육의 질은 한 명의 역량에 의존하기 보다는, 우수인력들의 상호소통과 협력을 통해 향상된다.

유럽공동체처럼 국가를 넘어 고등교육시스템을 공유하는 것도, 미국처럼 개별대학의 창의성과 경쟁력만을 우선시하는 것도, 저개발국가처럼 외국명문대학의 분교를 유치하는 것도 단순히 우리에게 이식할 순 없다. 우리의 시스템은 취약한 고등교육재정은 확충해 나가면서, 각개약진이 아니라 위기의식과 열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후위 대학들의 협력체계를 만들고, 국가가 뒤를 받쳐서 대학구성원들의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여전히 고등교육의 사회적 수익률이나 개인적 수익률이 여전히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지만, 높은 사회적 수익률을 기초로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정부다.

